



2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추모분향소에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모여 헌화하고 있다. /뉴스시스

“민주화 거목이 닦아온 길, 후배들이 뒤따르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광주분향소, 정치권 인사들 나서 조문·예우

“거목이 일궈온 가치를 광주의 정치 후배들이 가꿔나가겠습니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별세한 지 나흘째인 2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마련한 이 전 총리의 분향소에는 이날도 이 전 총리를 추모하러 온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방문이 쇄도했다.

분향소 운영 이틀 만에 600여 명이 넘는 정치권 인사들과 일반 시민들이 오가면서 방명록은 추모 글귀로 빼곡했다.

‘어르신 뒤를 이어 민주화 성지 광주를 더욱 빛내겠습니다’ 등의 방명록 문구를 작성한 인사들은 제단에 바칠 국화를 조심히 든 뒤 영정 앞에 모여 눈을 감았다.

수 백여 송이 국화 사이에 세워진 영정 속 이 전 총리의 얼굴은 분향소를 찾은 정치 후배들을 반갑게 맞는 듯 해맑고도 인

자한 미소를 띄고 있었다.

이 전 총리의 파스한 미소를 향해 성큼 다가선 인사들은 들고있던 국화를 내려놓은 뒤 고개를 숙이고 깊이 묵념했다. 민주화에 투신했던 선배 정치인의 안식을 기원하는 듯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고인의 이름을 되뇌는 인사도 있었다.

짧은 추모를 마친 인사들은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이었던 옛 전남도청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몰아 쉬었다.

올해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A씨는 “내란중식,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숙제가 산적한 상황 어르신의 별세는 크나큰 아픔”이라며 “이 전 총리의 가르침을 받들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로 후배들이 향하려 한다”고 추모했다.

B씨도 “박학다식하고 진취적이었던 이 전 총리의 모습은 광주정신과 맞닿아 있다. 광주는 이 전 총리가 향하는 길에 언제나

함께 해왔다”며 “거목이 스러진 방향으로 후배들이 뒤따라 변영하는 광주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1952년 충남 청양 출신의 이 전 총리는 집안의 지원으로 일찍 상경해 중·고등학교를 서울에서 졸업했다. 이후 1972년 10월 유신 당시 서울대생 신분으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에 연루돼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이 전 총리는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이던 1987년 김대중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 이후 열린 국회 5·18 청문회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전두환 등 신군부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1995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며

조순 서울시장과 함께 행정 경험을 쌓았고, 김대중정부 교육부장관, 노무현정부 국무총리를 지냈다. 총리 재임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역할을 분담하며 책임총리로 활약했다.

당 대표도 지냈다. 2012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한명숙 지도부가 19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자 이 전 총리가 당 대표 지휘봉을 잡았다. 다만 18대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당 대표 대행을 맡긴 뒤 물러났다.

이후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약하며 문재인 정권 창출의 공을 세웠다.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장으로 임명하면서 통일 정책 자문 활동을 맡는 등 말년까지 정치에 인연을 놓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기동취재부

광주·전남 통합청사 ‘개문발차’ 분산형 청사 국내·외 사례·숙제는

전남 동부·무안·광주 3개 기존 청사 ‘균형 있게 운영’ 합의
 국내·외 선례 많아… “갈등 최소화” 조례 제정, 공론화 중요

가칭 ‘전남·광주특별시’가 청사를 3곳에 분산 운영하기로 하고 주(主) 청사 또는 제1청사는 통합 이후 제도적 절차에 맡기기로 하는 개문발차식 ‘선결정, 후 보안’ 방침을 확정하면서 유사 사례와 후속 절차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광주·전남 통합 추진협의회 등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 18명은 전남 3시간의 마라톤 논의 끝에, 최종 결집이던 통합 지자체 명칭과 청사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를 했다.

통합단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해졌고, 청사는 전남동부(순천, 전남도 2청사), 무안(전남도청 분청사), 광주(상무지구 시청사)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무안과 광주는 각각 광역자치단체 본청으로 규모가 비슷하고, 전남동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분산형 청사는 국내·외적으로 사례가 적다.

국내에선 정부청사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 있고, 전남도청도 단적이 예다. 전남도청은 15개 실·국 중 3개 실·국이 동부본부에 분산돼 있다. 경기도는 남부청사(수원)와 북부청사(의정부)로, 충남은 내포와 대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각각 이원화돼 있다.

프랑스 옥시타니주는 2016년 통합 당시 툴루즈와 몽펠리에 청사를 이원화하고 경제와 산업은 툴루즈, 교육과 문화는 몽펠리에 쪽에 기능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 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일본 후쿠오카현, 영국 스코틀랜드도 분산형 청사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콘트롤타워와 상징성, 행정효율성 등을 이석부의장으로 임명하면서 통일 정책 자문 활동을 맡는 등 말년까지 정치에 인연을 놓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모델을 만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 신청사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통합 후 3청사 운영 방식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10조는 지자체 명칭과 구역 변경, 사무소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을 뿐 주사무소를 어디에 둘지, 어떻게 운영할지 등 분산형 청사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은 통합 후 의회 차원에서 밀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안 논의 과정에서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만큼 기존 광역단체 규모에 맞게 기능이 골고루 분산되거나 기존 시·도청 간 합의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별시장은 3개 청사 모두에 두루 들고 차관급으로 포진될 4명의 부시장이 역할을 분할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시·도지사, 국회의원 오찬회동에서 “시·도 청사는 어느 한 곳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청사를 모두 활용하고, 1:2 청사로 나누기보다 상부청사, 남부청사로 부를 것”을 추진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도민공청회에서 ‘특별시장은 3곳 중 어디로 출근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3개 청사를 어느 정도 다니면서 근무해야 하는데, 사실 특별시장은 잠시도 시청사에 있을 날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청사사를 정해야 한다면 지난해 광주·전남 광역연합(특별자치단체) 통합사무소 논란 때와 같이 광주 또는 광주 인근(나주, 화순), 무안청사 등을 놓고 광주와 전남 중·북부권,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간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의회 의결 과정에서 표심도 갈릴 수 있다. /전광훈 기자

Goheung Spaceship Terminal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2026.5.2. (토) - 5.5. (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